

### 국회의원·중앙부처, 익산 수해 피해현장 방문

# 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해야”

국회 행안위 중심 의원들  
중앙부처 간부 10여명 등  
망성 등 피해지역 방문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간부 등이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익산시를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17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 행정안전부·산림청·전북특별자치도 간부 공무원, 농어촌공사 관계자 등 10여 명이 익산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국회 신정훈 행안위 원장을 비롯한 위성곤·한병도·이해식 행안위 의원, 이원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참석했다.

또 행안부 김응균 안전예방정책실장과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 김광석 제35보병사단장,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 한현동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과장, 전북자치도 김준훈 경제부지사, 윤동욱 도민안전실장, 이정문 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정현을 익산시장과 김영석 부시장의 안내에 따라 침수 농가부터 제방 유실 하천, 산사태 등 폭우로 피해를 입은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우선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낭산면 산북천 상류 제방 유실 피해 현장이다. 금강지류인 산북천 상류에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자 빨라진 유속을 견디지 못한 제방 150m가 무너져 내린 곳이다. 이로 인해 인근 농경지로 흩날릴이 대거 범람하며 침수 피해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익산 수해현장을 방문한 가운데 정현을 시장 등 익산시 관계자들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익산시청 제공)

발생했다.

이어 망성면 화산배수장과 창리배수장을 차례로 찾았다. 용안과 용동, 망성지역은 기상이변에 따른 극강의 집중 호우로 인해 농가 침수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배수펌프 시설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자리에서 익산시는 창리배수장 수해복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허가 추진 협조를 건의했다.

또 성당면 연동 펌프장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지를 방문해 홍수 시 수위가 상승하면서 연동제수문 상단으로 유희하는 지점을 점검했다.

시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연동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 등 협조를 구했다.

끝으로 웅포면으로 자리를 옮겼다.

웅포면은 이번 폭우 당시 누적 강수량 407mm를 기록한 곳이다. 이들은 저수지 등 유실로 블루베리 하우스 40동에 침수 피해를 입은 웅포면의 한 블루베리 농가를 찾아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농민을 위로했다. 또 5ha 규모의 산사태로 마을과 농경지, 도로 위로 산의 흙과 나무가 떠내려 오는 합라산 구룡마을에서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과 정현을 시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 의원은 “익산은 지난해에도 수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됐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한 번 큰 피해를 입어 한 번 겪어도 힘든 일을 연달아 치렀다”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시

익산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상 기후로 인한 이례적 폭우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대응을 위한 배수펌프장 등 기반 시설이 완벽하게 항구적으로 구축돼야 한다”며 “우리 시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10일 기록적 폭우로 인한 익산시 피해액은 지난 16일 기준 공공·사유시설 피해를 모두 더해 198억 여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재정부담에 따른 익산시 특별재난지역 요건인 80억 원을 247.5%를 넘긴 것이다. 특히 사유 시설 피해의 경우 신청 접수가 마감되는 오는 20일까지 누적 집계가 늘어날 전망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 채상병 순직 1주기 추모공간 운영

전북자치도의회, 19일까지 의회청사 앞

“국회, 채상병 특검법 처리해 진실 규명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지난해 7월 19일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순직한 채상병 순직 1주기를 맞아 의회청사 앞에 추모공간을 마련하고 17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한다.

문승우 의장은 17일 김광영 도지사, 서거석 교육감과 함께 현화 후 묵념하며 채 상병을 추모했다. 또한, 이명연·김희수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이어 도와 교육청 등 집행부 간부들도 채 상병의 명복을 빌었다.

문승우 의장은 “채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진실규명이 되지 않아 크게 안타깝다”며, “많은 도민들이 함께 추모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추모공간을 차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채상병 특검법을 하루속히 처리해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건의안과 결의안 등을 통해 국회에 채상병 특검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해왔다.

/이만호 기자

## “수해 전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오은미 도의원, “기후재난에 신속 지원·근본 대책 세워야”



기후재난이 농업·농촌을 초토화시키고, 국가의 존망을 위협할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해 실질적인 예산 투입과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진보당)은 지난 16일 제41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와 같이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 의원은 “정부가 15일 완주군을 포함 전국 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익산·군산 등 도내 일부 지역이 여전히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해가 발생한 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난 2022년 정부가 자연재해 피해 농가 간접지원 농업정책자금 고사를 제정해 자연재해로 큰 피해

가 발생한 농가에 정책자금의 상환연기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수해 앞에서는 그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 농가의 생계 보장과 영농 재개를 위해서는 농업재해 정책자금에 대한 대출금 탕감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오 의원은 “수해 피해의 원인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제적 요인도 크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부, 농어촌공사, 지자체의 인일한 대처와 산사태 취약지구에 대한 정부의 관리 미비,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수도 작 위주의 치수정책 등을 질타하며, 하천 정비, 배수로 개선, 배수장 전면 확충 등 치수 정책의 전환과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수해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 복구와 영농 재개를 위해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피해 농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수해 복구에 책임 있게 임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 “대광법 위헌성 알려 전북차별 막을 것”

민주 이성윤 의원, 헌법소원 청구… “개정안도 함께 발의해 국회 통과시키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은 17일 전주시민들과 함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법’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광법은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정부는 이를 근거로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조성에 막대한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대광법 혜택을 받지 못해 전북 차별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성윤 의원은 지난 11일 전북특별



이성윤 의원

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광법은 대도시교통 생활권을 연결해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조성에 약 177조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비를 지원했지만 정작 전북은 단 한 푼의 국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으로

인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전북은 교통오지가 되어버렸다”면서, “전북만 차별하고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위헌적인 법률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리는 한편 개정안도 발의해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기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성윤 의원이 대광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그동안 전북을 차별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대광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에 많은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문승우 도의회 의장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군산4)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30여명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군산시 임피면 소재 토마토 농장을 방문하여 위로를 전하고, 피해복구를 위해 일손을 지원했다.

이날 수해복구 지원은 침수된 2만 그루의 토마토 작물을 절치하고 절거하는 작업으로, 문 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은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문 의장은 “제412회 임시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가능한 사무처 직원들이 모여 복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도의회는 앞으로도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도민이 어려움을 겪는 곳에 먼저 찾아가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의회의회의 개최

장수군의회의(의장 최한주)가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64회 임시회를 열고 장수군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한다.

이번 회기를 통해 군의회는 연초 계획하였던 각종 군정 사업들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장수군의 중·장기적인 계획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17일 첫날 본회의에서는 김광훈 의원의 ‘자연재해 대비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 촉구’에 대한 5분 발언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했다.

한국의 의원은 “지방도 721호선 도로 개선 및 산서 하일리 축사 약취 해소 방안”에 대해 운영질문을 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중앙부처 등에 대한 파견 규모 줄여야”

최형열 전북자치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5)이 17일 제41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과정에서 중앙부처 등에 대한 파견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형열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중앙부처 등에 대한 파견자 현황은 91명으로, 구체적으로는 3급 부이사관급 2명, 4급 서기관급 6명 등이다. 파견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별도 정원 60명, 비별도 정원 31명이다. 별도 파견의 경우 파견에 따른 결원 보충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비별도 파견의 경우 정원



최형열 위원장

외로 분류되어 결원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고, ‘승진 자리 만들기용’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형열 위원장은 전북자치도의 비별도 파견 규모에 대한 정부 지적사항도 언급했는데, 최 위원장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의 경우 지난 2021년 비별도 파견 인원이 과다하다는 감사 지적을 받았고, 이에 따라 대규모 파견 인원이 복귀한 사례가 있다.

/이만호 기자

## “도청사 내 은행들 재배치… 청사 효율성 높여야”

정중복 전북자치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중복 의원(전주 3)이 17일 자치행정국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도청사 내 은행들의 이용률이 매우 낮아 공간축소 및 위치 변경을 통해 청사 효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중복 의원은 “2005년 도청사를 서부신시가지로 옮기면서부터 도청 1층에 농협과 전북은행이 입주했지만, 최근 스마트뱅크 활성화 등의 이유로 은행 이용률이 매우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들에 제공하는 공간을 사무공간이나 도민을 위한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농협과 전북은행의 최근



정중복 의원

5년간 1일 평균 이용률을 살펴보면 각각 69.6명, 50.8명으로 이용률이 매우 낮으며, 자동화기기 이용률이 4~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중복 의원은 “20여 년 전과 비교해 도청의 조직과 인력이 크게 늘어 청사 내 사무공간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며, 도청을 찾는 도민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고창군의회의 임시회 폐회

고창군의회의(의장 조만규)는 17일 7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9일부터 진행된 9일간의 제30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9대 후반기 첫 임시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성만 의원) 소관의 △고창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발의 이경신 의원) 1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종훈 의원) 소관의 △고창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임종훈 의원),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등 3건,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더불어 임시회 마지막 날, 임종훈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현실적인 인구정책 방안으로 ‘세컨드 홈’을 주장하며 △세컨드 홈 단지를 조성할 것 △빈집을 활용하여 세컨드 홈으로 사용하는 것 △농촌 체류형 유희터를 활용에 관계 인구를 늘리는 방법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것을 제안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전기차 화재대응 시스템 점검·안전 대책 마련을”

전북자치도의회 문안위, 소방본부 대상 업무보고 청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17일 제412회 임시회에서 소방본부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먼저, 김성수 의원(고창1)은 전북 소방 청사의 절반 이상이 임차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차형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청사 이전 시 관련 시스템 정비를 철저히 하여 소방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길 당부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최근 전북자치도 내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건수에 대한 자료 요청과 함께 소방센터들이 전기차 화재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 방식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기차 화재가 기존 내연기관

차량 화재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장비와 대응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대처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하보다는 지상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각 소방센터의 대응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추가 장비 도입 및 소방관 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기 의원(부안)은 전북 도내 기업 내에서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물으며, 기업들이 법적 기준만 충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히 새만금 이차전지 기업에 맞춤형 화재 제어 시설을 안전하게 점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